"북, 핵보유 최후 수단…강제 폐기는 불가능"

광주 찾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 오버도퍼 교수

서울과 도쿄, 베이징을 무대로 뛴 40년 가까운 경력의 외교전문기자, 미국 내 최고의 지한파(知韓派)이자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를 광주일보가 단독 인터뷰 했다.

지난 1952년 한국전 참전 이후 지금까지 수십 번 한국을 방문했던 오버도퍼 교수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 11일 오전 광주시내 한 호텔에서 조찬을 겸한 인터뷰에 응한 오버도퍼 교수는 1시간 30분에 걸쳐 북핵문제와 한국의 대북정책, 한·미 관계, 5·18민중항쟁과 미국과의 관계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오버도퍼 교수와의 일문일답.

— 광주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 특별한 방문 이유는.

▲지난 1952년 미군으로 참전하면서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이후 1970년대 기자로서 취재를 위해 한국을 찾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학자로서 책과 각종 글을 쓰기 위해 수십 차례 한국에 왔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단 한 차례도 찾아볼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한국 방문 길에 3일간의 일정을 내 광주를 찾게 됐다.

미국에서 어느 누구보다 한국에 대해 잘 아는 내가 안 가본 곳이 광주여서 이번 기회에 광주를 찾은 것이며, 이번 방문이 앞으로의 저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광주에서 일어난 5·18민중항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5·18에 대한 많은 자료를 봤고, 직간접으로 관련된 많은 인물들과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80년 당시에 (내가) 광주에 없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5·18은 87년 6월항쟁과 연결되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 미국이 5·18 당시 20사단의 광주 배치와 광주 재진입을 미국 당국이 승인해줬다는 주장이 한국에서 설득력을 얻으면서 반미감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생각은.

▲1980년 당시 한국 군부가 부대를 이동시킬 때 미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동에 대한 승인은 필수지만 (이동) 목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게 관례였다. 북한에 대한 공격과 수비를 제외하곤 한국이 어떤 목적으로든 부대를 이용하는 것은 자유스러웠다.

당시 위컴 주한미군사령관과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린 결과다. 위컴은 5월 18일 이후 전두환으로부터 20사단 군부대 이동에 대한 승인 요청을 받고 승인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목적이 5·18 시민군에 대한 진압을 위한 것인지는 사태가 종결된 뒤에야 알았다고 (내게) 말했다.

> "5·18 때 전두환 요청 따라 미 한국군 이동 승인했지만 목적은 나중에 알았을 것"

— 현재의 한·미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지난 수년 간 맹방으로서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진 것이 사실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0년 당선되면서 미국의 정책은 오른쪽으로 많이 갔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당선된 뒤에는 한국의 정책이 왼쪽으로 많이 가서 갭이 커졌다. 그렇지만 동맹국으로서의 관계는 유지되고, 앞으로 양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프린스턴대 졸업
▲육군 중위로 한국전쟁 참전
▲워싱턴포스트 기자(도쿄특파원) 등 언론인 경력 38년
▲존스홉킨스대 교수
▲저서 : '두개의 코리아'(The Two Koreas), '대반전(The Turn)-냉전에서 신시대로'

—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6자회담의 전망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낙관했다.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낙관적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어제(10일) 6자회담을 취재중인 기자들과 통화를 했는데 전망이 예상 만큼 밝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솔직히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 몇 시간 만에도 상황이 반전되는 게 국제 관계이다. 개인적인 판단 만을 묻는다면 아직도 긍정적이라고 답하고 싶다.

— 한국 및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북핵문제는 정말 힘든 분야다. 북한의 모든 정치가 김정일 한 사람에게 귀속돼 있기 때문에 어떤 예측을 하더라고 불확실성이 다른 어느 것보다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후의 수단으로 핵을 보유한 것이다. 결국 강제적인 핵 폐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부시 대통령은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했지만 행동은 반대로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런 면에서 김대중 정부 이후 햇볕정책은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며, 앞으로도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흘 전에 만난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한나라당의 의견은 다르지만 자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이 계승·발전시켜야 할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는 북한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꿰뚫고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으로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 "한미,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핵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도출해야"

북한도 대화를 원하고 있다. 어느 정도 양보하고, 어느 정도 얻어낼 것인지 6자회담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끝까지 고집하고 포기하지 않겠지만 한국과 미국 등은 '핵을 완전히 없앤다'는 큰 목표 아래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현장과 시각

되풀이되는 당선무효 사태

정후식
정치부 차장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광주·전남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가운데 17명이 그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자에 대한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법원의 '선거사범 엄단' 의지도 한 몫하고 있다. 과거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벌금 80만~90만원으로 당선자들을 '구제'해주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전남지역 기초단체장의 경우 11일 현재까지 모두 5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체 22명의 5분의 1이 넘는 숫자로 전국 시·도 가운데 경북(6명)에 이어 가장 많다.

정종해 보성군수는 지난 5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난달 24일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인규 장흥군수도 부인이 선거 직전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군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앞서 전형준 화순군수는 재판 도중 사직했고, 고길호 신안군수도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중도 하차해 지난해 10월 각각 재·보선을 치렀다.

비단 단체장 뿐만 아니다. 일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20% 안팎의 의원들이 무더기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19명의 의원 중 3명이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다. 광주 서구의회도 13명의 의원 가운데 3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판 도중 사퇴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했고, 1명은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이밖에 전남도의회와 광주 남구, 영광, 장성군의회 의원 각 1명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으며, 여수·순천시의원 2명은 이미 의원직을 상실했다. 무더기 재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행정 및 의정활동 공백으로 인한 주민 피해다. 재판에 신경이 쏠린 단체장과 의원들에게 지역발전이나 공약 실천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일부 지역에선 벌써부터 재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물밑 선거운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기강 해이 등 각종 부작용도 예상된다. 선거만 끝나면 되풀이되는 당선 무효사태에 주민들은 맥이 빠질 수 밖에 없다.

4·25 재·보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애당초 깨끗한 후보를 뽑는 것만이 재발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who@kwangju.co.kr